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7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적극 추진 -
-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25, 목)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준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그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 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안건 중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광주와 경북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오늘 회의 안건인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 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3)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